

최근 한일갈등과 북일관계

이기태(통일연구원 연구위원)

1. 최근 한일 갈등의 현황

○ 일본의 대한국 경제제재 조치에 관한 원인 분석

-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불만(Japan Passing)
- 기술패권전쟁론: 경제 관점에서 한일 간 경제 역전 현상 방지
-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

○ 일본의 주장

- 한국의 안보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 미비
- 아베 수상, "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에서 진행된 조치를 재검토"

○ 문제제기

- 한반도를 둘러싼 전후 질서(체제) 전환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이

2. 아베 수상의 전후 체제 인식과 신한반도체제

○ 전후 체제의 탈피 지향

- 일본은 전후 질서에서 불완전한 국가(『아름다운 나라로(美しい国へ)』)
-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전후 질서의 형성
- '보통국가 일본', '강한 일본'
- 아베 수상의 수정주의 역사관

○ 현실주의자 아베

- 미일동맹의 딜레마(역사 vs 안보)
- 야스쿠니 신사참배(2013), 히로시마-진주만 상호방문(2016)
- 공식적으로 '전후 체제의 탈각' 언급이 없음.
-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샌프란시스코 체제 유지하면서 보통국가 추구
- 샌프란시스코 체제 질서를 파괴하는 부상하는 중국
-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동맹 강화,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전후 질서 유지 노선?

2. 아베 수상의 전후 체제 인식과 신한반도체제

○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

- 지난 100년 질서의 지속과 신냉전체제를 주목
- 중국 주도의 조공체제, 일본의 대동아공영권, 미국 주도로 구축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입각한 진영 대립
-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도 구질서 및 신냉전체제 유지의 한 요인

○ 향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방향성

-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굳이 유지하면서 추진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
-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변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상국가화 추구
- 미중 패권충돌 방지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격 대체라는 급진적 담론이 아니라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서서히 대체하는 연착륙이어야 함(김준형 2019)

3. 불완전한 한일 청구권협정 합의

○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

-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최초로 인정
- 한일 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: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
-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님. 청구권포기 협정?
-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한일 양국 간 재정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따라 해결
- 한일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체결

○ 일본측 주장과 비논리성

- 청구권협정의 합의를 파기하는 '국제법 위반' 상태라고 주장
- 최근 국제법에서 개인 청구권 인정
- 일본측 주장은 국제법과 한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한국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안기는 억지 주장

4. 한일 국교정상화와 북일 국교정상화의 연관성

○ 북일 평양선언과 일본측 논리

- 북일 평양선언(2002.9.) 제2조
- "쌍방은 ...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..."
- 일본측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추진
- 대북 경제지원과 함께 북한의 전후 배상, 즉 청구권 포기 희망
- 한일 청구권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북일 관계를 흔들 수 있음.

○ 한국측의 반대논리

- 일본의 주장은 국내외에서 제기된 개인 청구권 문제를 애써 외면
- 1910년 일본의 강제적 불법성에 근거한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배상 및 개인 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음(대한민국 대법원 판결)
- 북한의 민주화와 같은 내부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현재 한일갈등이 재연될 수 있음

5. 북일 관계

○ 보통국가 일본과 전후 처리

- 아베 수상은 전후 출생한 최초의 총리, 완전한 전후 처리를 통해 '보통국가' 완성
- 패전국 일본이 아닌 보통국가 일본
- 북일 수교에 따른 일본의 막대한 경제보상 및 투자유치 기대
- 남북,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일 관계의 외교적 공간 확대
- 한일관계의 '보통국가화'

○ 북일 국교정상화

- 전후 처리의 종착점
-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

5. 북일 관계

○ 재팬 패싱

- 일본의 미국에 대한 근본적 의심 존재
-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이 뒤처지는 상황 우려
- 1970년대 닉슨 쇼크 경험

○ 재팬 패싱의 극복

- 재팬 패싱은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,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'코리아 패싱', '재팬 패싱' 이 좌우
-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남북, 북미, 중국임. 일본 입장에서 북일 대화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음

5. 북일 관계

○ 아베 정부의 대북 외교 과제

- 참의원 예산위원회(2018.3.28.), 일본이 뒤처진다는 것의 의미?
- 아베 수상: 납치 문제,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논의 대상 제외,
핵실험은 중지하지만 핵보유 인정

○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

- 아베 수상: 기존 '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' 에서 최근 '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' 제안
- 『외교청서 2019』 내 " 최대한의 압박' 삭제,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북한인권결의안 보류
-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대북 대화를 전개

5. 북일 관계

○ 북한의 반응

-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난
-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 유도 및 북일 회담에서 협상 우위 확보
- 북일 국교정상화까지 염두에 둔 발언
- 향후 북한의 대일비난은 지속적으로 강경할 것으로 예상
- 북한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북미 대화를 통한 대북 경제 제재 완화가
므로 당장 시급하게 일본과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음

○ 북한 주도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

- 북한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강조
- 항일 운동을 통해 성립된 정권이라는 정체성
- 올바른 과거사 문제 처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요구
(잘못된 1965년 합의)
- 민족주의에 기반한 '남북한 vs 일본' 구도
- 한미일 대북 제재의 공조 틀을 약화

5. 북일 관계

○ 한일 갈등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연관성

- 한일 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이견차로 인한 갈등이 북일 수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
- 일본: 북한 내 개인청구권을 북일 수교와 동시에 소멸시키는 국내입법 조치를 요구
- 북한: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추가 보상액을 포괄적인 경제협력자금에 포함
- 한국: 1965년 체제의 '완전성' 회복, 북일 국교정상화에 새로운 기준 제시

6.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

○ GSOMIA 중단 이후 한일 간 안보협력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전환 필요

- GSOMIA 연장 중단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에 대한 유효한 협상 카드
- GSOMIA 연장 중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일 대화 실현을 위한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
- 향후 한일이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질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

○ 전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이해

- 미중 갈등,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한 신냉전 대결 구도 유지로 인한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자율적 공간이 제약
- 한일 갈등을 단순히 한일관계가 아닌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
- 신한반도체제와 보통국가화의 양립가능성 모색
-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

6.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

○ 1965년 체제의 불완전성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

- 이번 기회에 한국은 일본과 1965년 체제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
-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식민지 지배 불법성엔 대한 공감대를 일본사회에 확산

○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건설적 역할 마련

- 장기적으로 북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의 경제지원을 북한의 비핵화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려
- 북일 간 중재화(혹은 촉진자) 역할: 고이즈미 방북시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
- 북일관계 진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미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형성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일정 정도 도움

6.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

○ 남북관계 개선과 한일협력 사이에서 이성적 판단이 필요

- 일본: 배상금 문제 등에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준으로 대북 협상
- 북한: 위안부, 독도 문제 등 대일 역사문제 공동전선 구축 시도
- 북일 대화의 갈등 요소에 신중히 대응, 대북 지원 문제 등 협력 사안에 적극 대응 자세 필요

○ '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'의 적극적 홍보 및 이해

- 한반도 평화 상황 및 남북 관계 개선이 일본이 추구하는 '안정된 한반도' 형성을 위해 필요
- 일본의 국익에 부합

감사합니다

